

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이 승 길*

차 례

- I. 문제의 소재
- II.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
 - 1. 녹색성장·산업·기술의 개념 및 기본법 제정
 - 2. 녹색산업의 목적, 추진분야, 범위
 - 3.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창출
 - 4. 외국의 녹색일자리 변화
- III.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의 내용
 - 1. 적극적 공공투자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의 촉진
 - 2. 녹색고용 인프라 확충
 - 3.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의 추구
- IV. 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 V. 결 론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문제의 소재

21세기 들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¹⁾ 및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에 의존 하던 산업분야를 벗어나기 위하여 에너지 공급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한 신기술·신성장 산업이 새로운 성장패턴의 주도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²⁾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성장전략, 기업의 경영전략, 개인의 생애형태 등 사회·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 새로운 기술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이 요구된다. 선진국은 녹색산업의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하여 관련된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국력을 집중하면서 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쟁 우위에 있는 주력 산업을 육성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최첨단 기술 및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산업을 토대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경제성장의 정체가 우려되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문제가 심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기가 가중되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르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델과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사회의 불균형 해소 및 환경 보전·생태계의 녹색화가 요구되며, 효율적인 온실 가스의 감축 및 에너지의 자립을 강화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³⁾ 환경이 경제성장과 상충되지 않고, 경제

-
- 1)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중고령자(50~64세)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 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세대로서, 2010년 기준 약 712만명으로 총인구의 14.6%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자)’의 680만 명보다 30만 명이 많으며, 단카이 세대가 총인구의 5%를 차지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14.6%로 비중이 상당히 크다. 712만명 중 임금근로자는 311만명 정도이며, 2010년부터 2018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기후변화 및 자원고갈 측면에 대해서는 최호진 외,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연구』, 법문사, 2008, 135-159쪽(최재천 집필부분).
 - 3)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색성장위원회, 2009, 17-25쪽.

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된다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일찍이 선진국은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⁴⁾ 교토의정서 및 포스트 교토체제를 대한 발리행 동계회를 발표한 발리회의(2007),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⁵⁾ 국제합의를 도출한다는 협상의 로드맵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코펜하겐 회의, 2009.12), 그리고 아태 환경개발장관회의(2005)에서 녹색성장의 주도권, 한국의 녹색 일자리 창출전략(2005), 독일의 녹색산업정책(2007), 우리나라의 ‘저탄소의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에 새로운 비전 제시(2008),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2009.7)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너지원별 구성·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소비자의 선호·경제정책·수출주도 산업 등 각각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금융경제위기의 흐름 가운데 실업대책으로 녹색일 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있지만, 최근 정부는 예산만 책정해 더 투입하는 식의 사업을 제안할 때, 선행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차별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해결할 국정 현안의 제1순위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문제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전략 방향으로 현 단계에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력의 제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⁶⁾ 최근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떠한 일 자리를 만들며, 노사정의 역할에 대하여 그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4) 녹색(green)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를 규정하는 시대적인 키워드로, 영국의 금융·에너지·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그룹이 '녹색뉴딜'을 영국 정부에 제안한 것을 필두로, 유엔환경계획이 '녹색경제'를, 미국 오바마 정부의 싱크탱크는 '녹색회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5) 이때부터 국제노동기구(ILO)가 초청받아 참가하고 있다. 다만, 다른 국가기구에 비해 보조적인 지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ILO는 기후변화가 성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양질의 고용(Decent work)’ 아젠다와 병행해 녹색일 자리를 지속적인 정책의 아젠다로 설정해 성공적으로 양질의 녹색일 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 자리를 녹색화(greening)해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려고 일관된 경제·환경·사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6) 허재준, “일자리 창출력저하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연계된 고용정책 개선방향』, 노동부, 2010 참조.

서 녹색산업은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대체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녹색산업 분야의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법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녹색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산업·기술의 개념과 기본법의 제정, 목적·추진분야·범위,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의 창출, 외국(독일, 일본, 미국, 중국)의 녹색일자리의 정책변화를 살펴본다(Ⅱ). 또한 그에 대한 녹색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는 내용을 살펴본다(Ⅲ). 그리고 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를 찾아본다(Ⅳ).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위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녹색산업 확대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창출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Ⅴ).

Ⅱ.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

1. 녹색 성장·산업·기술의 개념 및 기본법의 제정

(1) 녹색성장·산업·기술의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2호). 즉 저탄소화⁷⁾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성장의 개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시스템을 탄소배출이 적은 저탄소사회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탄소화’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

7) ‘저탄소’란 화석연료(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기본법 제2조 1호).

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수비적 녹색화’라 한다. ‘녹색성장’의 단어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다 포괄하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진 합성어이지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선진국에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실현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파생되는 에너지·환경과 관련된 기술·산업에서 미래에 유망 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 융합도 시도해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촉진할 것이다.⁸⁾

또한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기본법 제2조 4호). 여기서 ‘녹색산업화’란 녹색기술⁹⁾, 환경친화적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공격적 녹색화’라 한다.¹⁰⁾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가 원만하게 결합되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경제 성장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논리는 낡은 사고방식인 것이다. 녹색성장은 환경 보호를 통하여 성장 능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성장이 조화롭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8)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의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을 말한다. 교통·건축·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생애형태도 포함되는 폭 넓은 개념이다.

9)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기본법 제2조 3호).

10)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저탄소형 제품과 기술에 대한 성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저탄소 분야의 세계 시장의 규모는 선진국의 감축의무의 수준, 개도국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협상목표를 통해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면서 새로운 세계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가 있다.¹¹⁾ 이에 녹색성장은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며, 각 직업과 분야에 걸친 노동력의 이동은 교육과 훈련기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¹²⁾ 이를 위해 경제기반의 다변화와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일자리의 대체와 전환을 통하여 가능한 한 현존하는 일자리를 보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성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¹³⁾

(2) 기본법의 제정

최근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¹⁴⁾ 등 녹색성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2010.1.13, 법률 9931호, 국무총리실)을 제정하였다.¹⁵⁾ 2009년 12월 2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후, 기본법시행령(제정 2010.4.13 대통령령 제22124호)과 함께 2010년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법은 정부·기업·국민에게 녹색경제의 실현, 녹색기술·산업 육성, 온실가스의 감축 및 에너지의 절약, 녹색생활의 실천 등 녹색성장을 이행하는 책무를 의무화·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큰 전환점이라 볼 수가 있다.

11) 이지훈 등,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CEO Information, 제675호, 2008.10.8, 삼성경제연구소, 1쪽.

12)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녹색일자리에 대한 정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효과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13) 정형우, “OECD의 녹색일자 연구 동향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노동』, 2010년 1월호, 42쪽.

14)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기본법 제2조 8호).

15) 이전에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39호 2009.1.5 제정)을 두어 2009년 2월 16일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활동하고 있었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이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동 기본법은 경제사회 발전에 무게를 둔 지원법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과 국민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녹색성장 정책방향을 미리 알려주며, 녹색성장의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된 계획과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인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¹⁶⁾ 녹색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기본법 제35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에서는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1항),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¹⁷⁾

2. 녹색산업의 목적, 추진분야, 범위

(1) 녹색산업의 목적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을 동시에 추진해 잠재적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장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발전하고 있다.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상호 융합하여 ‘녹색뉴딜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중복되고 지향점이 불분명한 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경제의 구현과 지구환경의 보전을

16) 류필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변화의 시작”, 『나라경제』, 2010년 6월호, 14-15쪽.

17) 녹색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동 법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킬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요소가 되도록 하는 장치가 없는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노진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와 노동조합의 과제”, 『노동저널』, 2009년 8월호, 98쪽).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실제로 작동·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먼저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기획단’은 정책방향·전략 설정 및 평가, 기획재정부는 부처간 중복사업의 조정과 연계사업 사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재정 조정·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각 부처별로는 다양한 녹색뉴딜 사업의 발굴 및 선정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¹⁸⁾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의 이용과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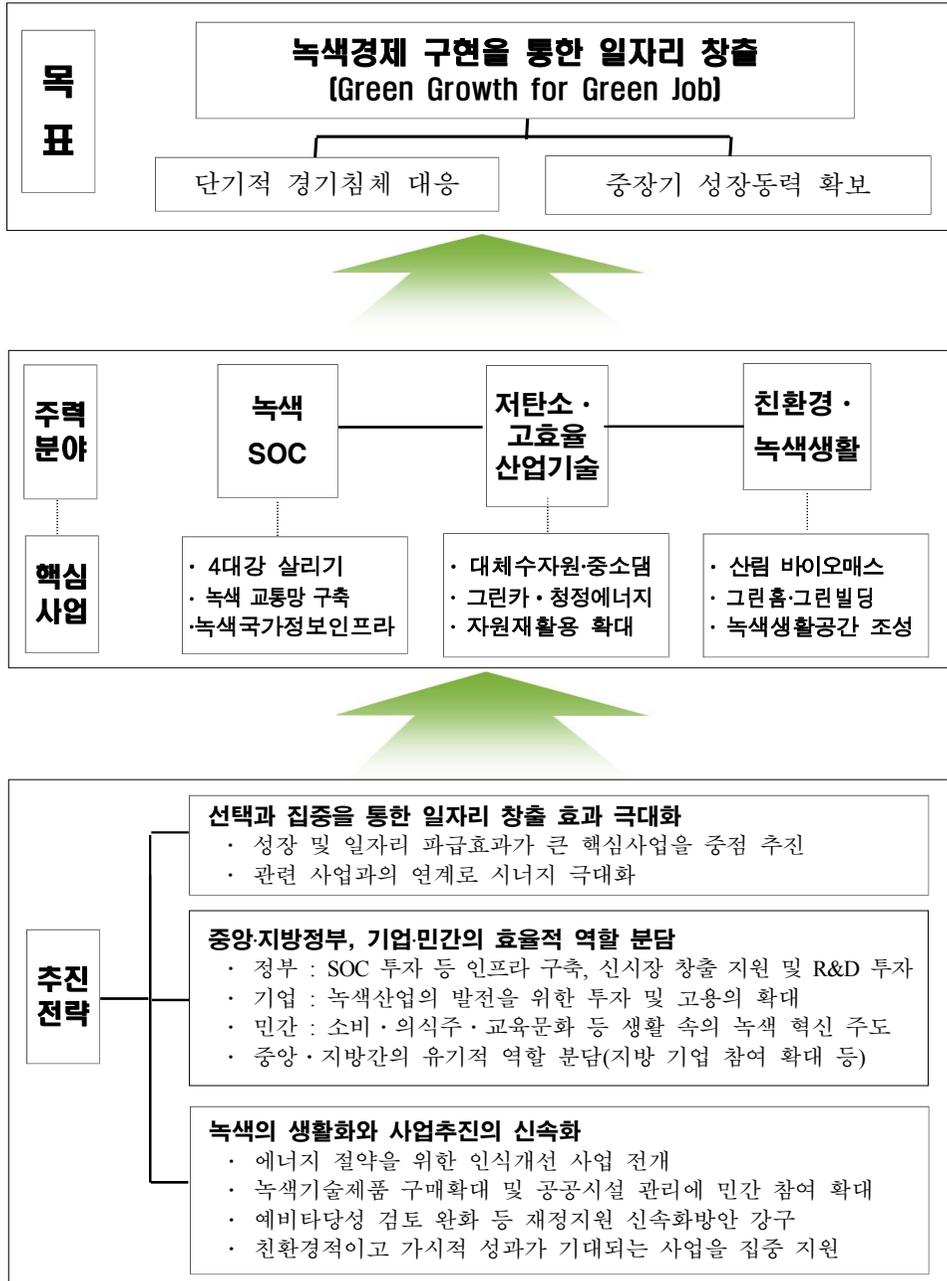
(2) 녹색산업의 추진분야

녹색뉴딜사업이 포괄하는 범위로는 녹색경제로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개발 등 자원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② 녹색 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③ 탄소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④ 산업·정보 인프라의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 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다른 정책·전략과의 관계에서, 녹색뉴딜사업은 ①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 중에서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의 창출 효과가 큰 사업, ② 다른 ‘녹색’사업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딜」사업(일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의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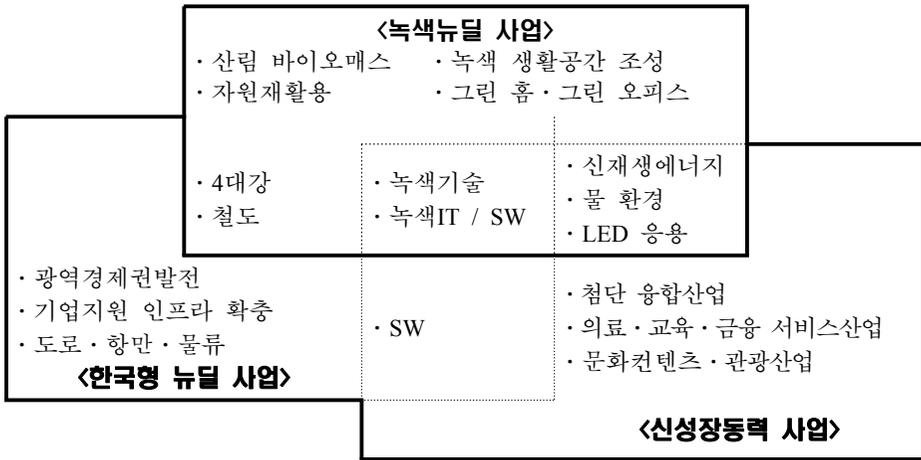
18) 기획재정부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녹색 New Deal 사업」추진방안, 2009. 1. 6(국무회의보고자료), 1쪽.

19) 기획재정부등, 위의 책, 2쪽.



[그림 1] 녹색뉴딜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²⁰⁾

20) 기획재정부등, 위의 책, 3쪽.



[그림 2] 녹색뉴딜 포괄 범위

(3) 녹색산업의 범위

1999년 OECD의 녹색성장에 포괄되는 산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녹색성장에 포괄되는 산업의 범위

구 분		내 용
친환경 산업	오염관리	대기오염통제, 폐수관리, 고형폐기물,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발 및 정화기기, 소음 및 진동 저감,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
	청정기술 및 관련제품	청정기술 및 공정, 청정제품
	자원관리	실내공기관리, 물공급, 자원 재활용,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회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어업, 산림과 자연재해 관리, 관광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광의로 청정에너지 산업에 포함 가능)		수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에탄올, 바이오디젤),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등 개발 및 생산관련 산업

3.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창출

(1) 국정운동의 비전으로서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일자리(Green Job)’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일자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녹색일자리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은 정립되지 않다.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보고서에는 녹색일자리이란 자연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데 기여하는 농업, 산업, 서비스업, 행정분야의 일로 정의한다. 녹색일자리는 1·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3차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토지·물 등의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임업, 제조업, 태양, 풍력, 조력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 및 재생 에너지 산업, 건설, 폐기물 관리 등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산업 및 친환경 주택 건설,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삼고, 신성장 동력의 확충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 개선을 달성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효과를 거두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었다. 즉 2008년 건국 60주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의 녹색성장’전략을 국정운동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후 각부처는 공동으로 발표한 ‘기후환경 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9.19)에서는 녹색성장을 온실가스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라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정방향의 설정은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출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후 각 부처별로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2008년 9월 11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열쇠, 그린 에너지산업 발전전략”²¹⁾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도 2009년 1월 7일 환

21) 태양광, LED(Light Emitting Diode), CCS,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9대 분야를 2030년

경기술·산업 육성·녹색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일자리 22만 개를 창출하는 ‘환경분야 녹색성장 4대 분야 49개 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²²⁾ 이와 같이 각 사업간의 연계를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재정과 연계하여 정책 패키지화를 도모하고 기대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9년 7월 향후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이에 182조-20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56-181만 명의 일자리를 156만-181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²³⁾

그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정부 부처별로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0년 제1차 회의에서는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그후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발표하였다. 다만, 각 부처별의 내용은 전년도와 비교해 상세한 설명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한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녹색일자리의 창출은 노동부문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서, 정부는 녹색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아젠다의 관리와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저탄소 산업으로 이행시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직업훈련 과정의 확충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행과정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고,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적응·직무훈련

까지 집중 육성해 그린 에너지 산업 분야의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1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2) 맥킨지 그룹 산하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정책 대안"이란 보고서에서는 "풍력, 태양광 같은 청정에너지나 녹색산업이 고용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정했다. 그 대신에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역시 서비스산업이 최고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는 녹색산업뿐 아니라 기존의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고용 확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미 큰 고용 기반이 갖춰진 산업분야에서는 조금만 생산성을 높여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녹색일자리는 성장 촉진제", 뉴스위크 한국판, 2010.3.31, 28-29쪽).

23) 권순우·신창목 외, SERI 전망 2010, 삼성경제연구소, 398-399면.

등을 통하여 순조로운 전직과 일자리 정보의 제공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녹색 일자리가 양질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 양질의 고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용·직업훈련·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는 위와 같은 정책계획을 가지고서 기후 변화, 고령사회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너지·환경, 바이오 등)를 개척하면서, 세계시장 규모의 확대 및 국내기업 점유율의 증대, 선진 기술역량의 제고(수송시스템, 새로운 IT, 융합 신산업)를 토대로 다른 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세계화된 틀을 만들어 경제성장 및 저탄소 경제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녹색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녹색성장은 종전과 달리 친환경 정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반면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켜서 녹색산업을 팽창시키는 반면에 비녹색산업을 퇴출시키는 산업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녹색산업으로 인력의 유입, 비녹색산업에서 인력의 유출과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도대체 어디에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기술로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는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녹색산업을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면 근로자와 국민의 소득·소비·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정부의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은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녹색일자리의 유형에 따른 대책 필요

현실적으로 녹색일자리의 문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정합적이지 않고 시장적 해법과 규제적 해법이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으면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어렵다. 녹색일자리의 유형은 폭넓게 연구와 개발, 생산품 설계·제조, 판매 및 유통, 시설의 설치, 시설의 운전과 보수 관리 등 다양한 기술과 숙련 수준의 인력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경우 녹색성장을 추진하게 되면 연구개발 분야에 지식집약적인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 우선되지만, 기존의 폐기물의 분해·재활용하는 단순기능 일자리의 성장도 뚜렷해질 것이다.²⁴⁾ 따라서 녹색일자리가 오히려 유해한 작업장의 환경과 저임금을 제공하는 격차의 확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녹색일자리가 임금의 적정성, 산업 및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녹색일자리의 확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시되고, 고학력 사회의 특성상 녹색일자리로 인력을 유입하도록 유인할 수 없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기업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우선 대외에 녹색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²⁵⁾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규제보다는 인프라 구축과 공동 R&D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책지원을 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수립, 집행을 뒷받침함으로써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4) 프랑스의 경우 37만개의 녹색일자리(전체 고용의 1.5%)가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환경 보호 활동인 쓰레기 처리, 하수처리에 치중하고 있다. 초기에 녹색일자리란 실업자, 비숙련자, 청년 구직자 등에 대하여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등을 통해 주로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증진 전략을 추진하는 중에 있다(노동부, “Green Job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국제노동정책브리프』 제24호, 3쪽).

25) 김희찬 등,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CEO Information, 제71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7.29, 18쪽.

4. 외국의 녹색일자리 변화²⁶⁾

(1) 독일²⁷⁾

독일은 녹색일자리, 녹색기술 및 녹색경제개발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였다.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선도자이다. 1986년에는 독일 내에 ‘환경·자연보호·원자력 안전부’가 창설되고, 1987년 ‘앙케이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투자 및 세재개혁 등을 통해 추진하였다. 1990년대 초반 기후변화가 국제 아젠다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환경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에 출범한 ‘기준가격 의무구매제(FIT, 고정가격 구매제)’를 도입하며 유틸리티 회사가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재생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 조례’를 도입하여 생산하는 포장재에 대한 각 회사의 비용지분을 의무화하였다. 이후 생태적 세계 개혁, 단계적 원전 폐기법, 신재생에너지법(2000) 및 공세적 기후변화 정책 마련 등 주요 정책 변화는 1996년 ‘적녹연정’이 주도하였다. 2001년 ‘이산화탄소 감축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²⁸⁾ 최근 2007년 4월 G8 정상회담 준비 회의에서 독일 환경부는 ‘기후 아젠다 2020’을 통하여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한 8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이 쉽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독일의 산업사회를 구조조정하면서 그 발달의 대약진이 요구됨을 의미하였다. 그 결과 독일은 환경 관련 기술(열 용량 측정기구의 측정 및 통제 기술, 급속히 성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수출국으로 미국을 앞질렀다. 나아가 2006년 독일 업체의 ‘재활용 및 효율성 기술 수출 주도’를 통한 국제시장의 진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환경기술 마스터 플랜’ 결정을 이끌어냈다.²⁹⁾ 이로서 폐기물 재

26) 김승택,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8, 44-47쪽.

27) Miranda Schreurs, "환경보호, 기술혁신 및 녹색일자리-독일식 모델을 중심으로 한 고찰-",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12, 28-36쪽.

28) 미래기획위원회 엮음, 『녹색성장의 길』, 중앙북스, 2010. 112면.

29) 독일은 이른바 ‘에콜로지컬 산업정책’을 통해 환경산업을 육성해 왔고, 그 결과 환경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녹색일자리 창출을 거두었다. 신재생 에너지의 체계적 확대는 환경 및 기후정책적 관점과 독일의 혁신, 성장, 고용의 측면에서 선순환을 일으켰다. 그후 바이오 매스 분야, 수력발전 기술의 수출 분야에서도 녹색일자리 창출을 거두었다. 이미 독일 정부는 2006년말 충분히 교육 받은 노동력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이 미래이다’라는 주도권을 마련해 녹색 일자리의 구직을 위한 개인별 교육을 구상하였다. 2000년 이후에야 연방제도로 발전해 대규모 풍력 발전 및 관련된 고용 성장에 따라 계속 발전해 왔다. 풍력 발전으로 독일 에너지원의 7%가 충당되며, 이 풍력 부문에서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8만 2,100개가 창출되었다.³⁰⁾ 이러한 독일식 녹색일자리에 대한 접근법은 미국 등의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일본³¹⁾

일본경제는 1990년대의 장기불황을 거쳐 2000년대부터 회복기조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기반 약화,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약화현상에 봉착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사업분야)을 위한 해법으로 ‘저탄소사회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엄청난 기술과 아이디어·제도·노력·제품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일본은 기후변화의 협상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환경적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1990년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 1992년 초 일본의 ‘뉴선샤인 계획(New Sunshine Program)’, 1994년 일본은 최초로 태양열 지

보전 분야의 취업자 수가 180만 명(노동력인구의 4.5%)에 이르고, 자동차·공작기계 산업에 필적할 만한 규모이다(정성춘 외,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73면).

30) Jill Kubit, Michael Renner, Sean Sweeney, “녹색일자리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12. 7쪽. ; 독일의 의무구매제는 덴마크의 풍력 개발 및 녹색고용의 성공을 주도해 온 동인이며, 풍력 분야 2, 3위인 미국 및 스페인의 풍력부문 일자리 수의 2배를 상회한다고 한다.

31) 정성춘 외, 앞의 책 참조.

붕 설치 지원 10개년 계획을 시행했고, 2005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2007년 5월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사회의 비전은 담은 ‘Cool Earth 50 비전’을 발표했고, 2008년에는 ‘Cool Earth 50 추진비전’, ‘후쿠다 비전’,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을, 2009년 민주당 신정부는 저탄소사회의 구축을 위한 강화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로서 일본은 기술개발로 에너지의 절약, 대체에너지의 기술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태양광, 풍력, 차세대 자동차, 연료전지 분야)에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왔다. 일본은 2008년 이후 앞으로 5년 동안 3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의 전략은 대내적으로는 저탄소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계몽하며, 기업에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한 제품과 기술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정부연구 개발투자의 중점 분야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³²⁾ 일본 경기부양책은 2009년에만 2%의 실질 GDP 성장과 40-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3) 미국

부시 행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미 연방 정부는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 대선에서 선출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녹색성장의 공약과 함께 실제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공약으로 내세워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기간 동안 오바마와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종합계획(comprehensive New Energy for America program)’을 공약했는데, 주요 내용은 청정 에너지 미래 구축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경주시키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 투자 등을 하고서 5백만 개의 신규 일자리(일명 그린 잡)를 창출한다는 것이었다.³³⁾

32) 장석춘, “경기침체·고령화-녹색성장이 해법이다-일본의 저탄소전략”. 공감코리아 ; Jill Kubit, Michael Renner, Sean Sweeney, “녹색일자리 현황”, 8쪽.

33) Miranda Schreurs, “환경보호, 기술혁신 및 녹색일자리-독일식 모델을 중심으로 한 고찰-”, 34-35쪽. ; 그 밖에 2015년까지 플러그인 수소연료 차량(겔론 당 주행거리 150마일) 100만대 양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비중 2012년경 10%, 2025

이들은 연료 경제규범의 증대 및 차세대 친환경 차량의 구매에 대한 7,000달러 세제 혜택, 전국적인 저탄소 연료 규범의 수립, 기존 석유·가스 개발권에 대한 ‘사용이 곧 고갈(use it or lose it)’이라는 접근 방식의 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논의되는 실정이나 미국의 민심이 원자력 에너지로 회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원전 건설의 재원을 담당할 주체가 출현할지는 여전히 의문시되기 때문이다.³⁴⁾

한편, 응집력 있는 전국 단위의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전략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의 각 주정부 및 시정부에서 이미 신재생에너지원 기준, 에너지 효율성 기준, 태양열 시설 설치 계획, 인력의 개발·훈련, 지역 탄소배출권의 거래제(Cap-and-trade systems)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가 전미 차원 외에도 몇 개 전국단위 계획과 비교해 볼 때 동 분야를 주도한 사실이었다. UC버클리 대학의 200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7-2007년 사이 에너지 효율성 개선 노력으로 15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반면에 줄어든 일자리 수는 2만 5천 개 미만이었다.³⁵⁾ 2008년의 ‘녹색경제 회생 프로그램’은 2년 동안 1,000억 달러를 6개의 녹색 인프라 분야(건물에너지 합리화, 대량 수송, 스마트 그리드, 풍력, 태양열, 개선된 생물 연료)에 재정적 투자 확대를 통하여 200만개(직접적 일자리 93만 5,000개, 간접적 일자리 58만 6,000개, 유발 일자리 49만 6,000개)의 일자리가 효과적으로 창출되어 경제성장이 강화될 것이며, 미국을 저탄소 경제로 바꾸기 위하여 시급한 장기 계획을 위해

년경 25% 확보, 배출권 총량거래제도(cap-and-trade program)의 경제적 실시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2030년경까지 신축 건물의 탄소 非 배출화를 목표로 한 ‘건축 효율성 비전’ 수립, G8 회원국 및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글로벌 에너지 포럼의 창설, 청정 석탄 기술 개발 및 응용 등이 있다.

34) Miranda Schreurs, “환경보호, 기술혁신 및 녹색일자리-독일식 모델을 중심으로 한 고찰-”, 36쪽

35) Jill Kubit, Michael Renner, Sean Sweeney, “녹색일자리 현황”, 8-9쪽. ; ‘California Million Roofs Program’은 일본의 관련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 시행해 2006년 태양력 발전 목표량을 3,000MW로 설정했는데, 2007년 세계 태양광 전지 발전량이 3,733MW였음을 고려할 때 매우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태양력 발전 역량을 30배 증가, 11년 이상 32억 달러의 태양력 발전 시스템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을 준비시킬 것이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2009년 초에 완전히 이행되고 실업률이 여전히 2008년 7월 수준인 5.7%라면 실업률이 4.4%로 하락하며 실업자수가 880만 명에서 68만 명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³⁶⁾

최근 미국 정부는 2009년 ‘미국재건 및 투자확대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ARRA)’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940억 달러를 녹색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10년 일자리 프로젝트의 결과 ARRA의 녹색분야에서 43만~58만 개의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³⁷⁾ 2009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추가 고용제안’을 발표하였다. 동 추가전략은 일자리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가지 핵심 분야(소기업³⁸⁾의 투자와 고용 및 신용접근도 확대, 인프라 투자, 에너지효율 및 청정에너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오바마 가정 주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또는 'Homestar 계획'으로 명칭)을 위한 지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고용진작 프로그램 외에, 경기침체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계층(최하위 그룹)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4) 중국³⁹⁾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인구 규모로 에너지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

36) Robert Pollin,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정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12.19-27쪽. 실제로 2009년 1월에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대책이 발표되었고, 총액 7,87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캘리포니아주)이나 풍력(텍사스주) 등에 대한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등 지원조치를 강화하였고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여 이 분야를 미국의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정성준 외, 앞의 책, 72-73면).

37) 노동부, “미국의 일자리프로그램 최근 진전 상황”, 『국제노동정책브리프』 제70호 (2010.4.20), 2쪽.

38) 미국 중기청은 소기업을 500인 미만 기업으로 전체 기업의 99.7%, 전체 GDP의 50% 이상 창출하고 있다. 소기업은 전체 근로자 120백만명 중 60.2백만명이 고용되고, 1993-2008년 중에서 창출 일자리의 64%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과 비교해 근로자 1인당 특히 취득율은 13배를 차지하고 있다.

39) Jill Kubit, Michael Renner, Sean Sweeney, 앞의 글, 9-10쪽.

다. 중국이 매주 평균 화력발전소 1~2개를 전산화하고 있지만 2020년경에는 전체 전력수요의 15%를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충당할 목표를 수립해 동 분야에서 급속하게 발전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중국은 풍력과 태양력의 발전 속도는 놀라운 수준이며 조만간에 관련된 제조업계의 선두가 될 전망이다. 중국 내의 관련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2004~2006년간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20배가 늘어난 61억 달러 수준이며, 2007년에는 120억 달러로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앞질렀다. 중국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에서는 2015년경 중국의 풍력 발전량을 현재보다 8배 늘어난 5만 MW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는 독일의 현재 발전 가능량(22,200MW)의 두 배를 초과한 것이고 세계 풍력 발전량의 24% 정도에 다다른다. 이렇게 관련된 설비 제조가 증가한 이면에는 풍력발전의 역량이 증가한 것 이외에 국내 제조업의 요건이 동인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풍력 터빈 부품의 70%를 자국 내에서 제작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수입관세의 경우 부품 3%, 조립부품 8%, 완전 조립터빈 17%로 상이하게 책정하고 있다. 최신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풍력 터빈 생산의 33~41%를 차지하고 있다.⁴⁰⁾

Ⅲ.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의 내용⁴¹⁾

1. 적극적 공공투자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의 촉진

(1) 녹색뉴딜 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뉴딜은 환경위기·자원위기의 심화에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 전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융합함으로써, 현재의 경

40)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로 확장을 계획하지만 아직도 블레이드, 기어박스 그밖에 중요 부품의 품질 개선이 남은 과제이다. 중국산 풍력 터빈의 경우는 제조원가가 미국산과 EU(유럽연합)산보다 저렴하지만 유지 비용이 훨씬 높아 애초 저렴한 제조원가의 가격경쟁력을 의미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숙련된 엔지니어, 품질 및 풍력 터빈 부품 부족 등은 중국 터빈 산업의 남은 과제이다.

41) 녹색성장위원회, 앞의 책, 268-272쪽.

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를 녹색경제로 이행한다는 의미이다. 녹색뉴딜사업은 (i)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ii) 다른 ‘녹색’ 사업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녹색성장과 연계성이 강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9대 핵심사업 36개 연계사업’에 대하여 선제적인 투자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자리의 창출을 추진한다. 재정은 2009~2012년까지 약 50조 492억원(국비 37조 5,411억원, 지방비)을 투입해, 약 96여 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9개 핵심사업에 총 39조원 규모를 투입해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7개 연계사업을 통하여 총 11조원 규모를 투입하고 27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2009~2012년간 청년일자리(15~29세)는 4대강 살리기, 산림 바이오 매스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0만개 창출을 추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청년 일자리(만개, 추정)는 4대강(2.7만개), 산림 바이오 매스(2.3만개), 그린홈·스쿨(1.6만개) 등이다.⁴²⁾

추진기간 중에는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녹색위원회(방향, 전략 설정, 평가), 기획재정부(재정조정 등), 각 부처(사업발굴 및 사업진행)가 수행하게 된다. 녹색성장 전략과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재정과 연계하여 정책패키지화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며 분야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또한 공공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투자 사업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는 등을 추진한다.

42) 기획재정부 등, 앞의 책, 13쪽. 구체적인 내용은 ‘부문별, 연도별 일자리 창출규모(부처 제출 사업기준)’ 및 ‘녹색뉴딜사업 설명자료-부처 제출기준-’ 참조.

<표 2> 9대 분야 일자리 창출 예측

주력분야	9대 분야
녹색 SOC	-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 - 녹색교통망 구축 - 녹색국가정보 인프라구축
저탄소·고효율 산업 기술	-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주소댐 건설 -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화 확대
친환경·녹색생활	- 산림자원 조성 및 활용확대 -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 및 그린스쿨 확산 -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의 조성

<표 3> 녹색뉴딜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 추진계획

정책수단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신규 여부
	착수	완료		
예산,제도,세계	2009년	2013년	기재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	계속

<표 4> '09~'12년간 핵심·연계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단위 : 억원, 만개)

	재정소요			일자리		
	기반영	추가소요	소계	기반영	추가일자리	소계
핵심사업	32,223	36조원 규모	39조원 규모	6.3	63.0	69.3
연계사업	11,403	9조원 규모	11조원 규모	3.0	23.3	26.3
총 계	43,626	45조원 규모	50조원 규모	9.3	86.3	95.6

주 : 1) 4대강(18조원, 28만개), 녹색교통망(11조원, 16만개), 산림바이오매스(3조원, 23만개)

2) 재정소요 : 국고 + 지자체·민간 부담분

(2) 녹색기술 개발, 산업 육성에 의한 본원적 녹색일자리 창출

먼저, 27개 중점인 녹색기술 개발·상용화 관련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2012년까지 '5개 영역 27개 기술 핵심기술 분야'(에너지원 기술(9)/에너지 고효율화 기술(4)/산업공간 녹색화 기술(5)/환경보호자원 순환

기술(8)/무공해 경제활동 기술(1))에서 약 48만개를 창출한다. 이에 연구개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의 상용화·제조, 설비·건설 등 고급기술 연구 인력부터 현장 실무인력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⁴³⁾

또한, 그린 IT의 육성 및 IT 융합의 경제·산업 녹색화에 따른 녹색 인력수요를 창출한다. ‘2개 분야 9개 핵심과제⁴⁴⁾’를 추진함으로써 2013년까지 약 4만 8천개 창출한다. 총 소요예산은 2009~2013년까지 4조 3,445억원이다.

그리고,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고효율·고성능을 지향하는 녹색 작업장을 혁신하고 기업의 녹색경영을 확정하는 등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녹색 작업장의 혁신 및 녹색경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의 지원을 실시하고, 또한 녹색 상품과 관련된 시장 형성·확대를 위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고, 그리고 소비활동의 촉진과 관련된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의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녹색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장의 녹색 혁신, 녹색 경영 등에 필요한 내부 조직의 신설 또는 관련된 인력의 확충 등 개별 기업의 녹색화 지원촉진과 관련한 신규 사업모델 창출(표준개발 등 연구, 컨설팅, 전문교육 등)과 관련한 일자리의 확대 등을 들 수가 있다.

<표 5> 녹색 기술개발, 산업육성에 의한 녹색 일자리 창출 과제 추진계획

정책수단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신규 여부
	착수	완료		
예산, 제도, 세제	2009년	2013년	각 부처	계속

43)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체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태양에너지 이용분야의 7~11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도 풍력발전, 바이오 매스 에너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

44) 그린 IT 분야(그린 IT 제품, 서비스, 네트워크, 3개 핵심과제) 및 IT 융합 경제·산업 녹색화(6개 핵심과제).

(3) 녹색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 육성

녹색 산업분야의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전략적으로 발굴·육성하는 것이다. 2013년까지 총 3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⁴⁵⁾ 여기서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아가 ‘녹색 사회적 기업’은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재활용 산업, 지역 생태환경과 관련된 산업 분야 등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립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대한 일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수익모델이 우수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핵심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⁴⁶⁾

<표 6> 녹색 사회적 기업 육성 연도별 목표수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0개	90개	180개	245개	300개

<표 7> 녹색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 육성 과제 추진계획

정책수단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신규 여부
	착수	완료		
예산	2009년	2013년	노동부 각부처	계속

45) 최근 노동부와 환경부는 녹색분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진의 재활용·청소 이외에도 환경교육·보전·보존, 녹색구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2012년까지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300개가 만들고 1만여개 일자리가 창출하기로 하였다.

46) 기업의 경쟁력 강화해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거의 제자리 성장이었지만, 유독 하이브리드카만이 전년과 비교해 38% 증가한 35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계 자동차가 70%를 점유했다.

2. 녹색고용 인프라 확충

(1) 녹색 친화적 국가 기술자격 정비(그린 자격증의 도입)

우리나라 기업들도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장착하고, 세계의 친환경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기존의 자격증에 환경친화적 영역(예, 그린 자동차 정비기사, 그린 전기기사, 그린 건축기사 등)에 대한 추가 시험 또는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그린(Green) 자격증’을 부여한다. 환경·에너지·농업·제조업 등의 녹색화에 따라 관련된 자격제도를 녹색 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할 때에 녹색성장에 바탕을 두고 개발·자격·출제기준·훈련기준 등에 반영해야 한다.

<표 8> 녹색 친화적 국가 기술자격의 정비 과제 추진계획

정책수단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신규 여부
	착수	완료		
제도	2009년	2013년	노동부	신규

(2) 녹색일자리 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녹색인재의 수급 현황, 직업 전망 등의 수급 정보, 일자리의 매칭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종합 정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녹색 일자리의 정의 및 범위의 체계화, 직종 및 직무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녹색일자리 수급통계 DB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고용 연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실태조사, 중소기업 실태조사(인력편), 에너지 산업인력 수급실태조사, 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등의 종합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9> 녹색일자리 고용연계 인프라 구축 연도별 목표수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20%	40%	80%	100%

<표 10> 녹색일자리 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제 추진계획

정책수단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신규 여부
	착수	완료		
제도	2010년	2013년	노동부 각부처	신규

3.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의 추구

(1) 녹색일자리의 모니터링 강화

먼저, 녹색일자리 창출의 모니터링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 감독을 강화한다. 녹색일자리 종합정보의 DB를 기반으로 근로조건, 산업안전기준 등의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정보 제공을 통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또한, ‘그린(Green) 사업(중요한 화학물질을 노출하는 수준의 저감)’을 시행한다. 급성 중독성의 직업별 유발 10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발생 화학 물질의 유해성, 작업환경의 실태 등을 토대로 ‘사업장별 차등관리’를 통해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절차를 떨어뜨린다. 여기서 ‘사업장별 차등관리 방안’의 사례로서는 ‘녹색사업장’은 사업장의 자율 보건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황색사업장’은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유해물질 관리기법의 컨설팅 또는 시설개선의 지원, 적색사업장은 지도 감독·강화를 통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유도한다.

<표 11> 녹색일자리의 모니터링 강화 과제 추진계획

정책수단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신규 여부
	착수	완료		
제도	2010년	2013년	노동부	계속

(2) 녹색 작업장으로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먼저, 중소기업의 녹색 작업장 전환(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유해 물질 취급공정·설비 보유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기술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현장,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을 장해하는 예방 기법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재해 유발 및 유해물질 취급 공정을 근로자에게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산·학·연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기법을 연구·보급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및 작업장의 예방시설을 개선한다면 자금을 지원한다.

<표 9> 녹색 작업장으로의 근무환경 개선의 지원 과제 추진계획

정책수단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신규 여부
	착수	완료		
제도	2009년	2013년	노동부	계속

IV. 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1. 정부의 회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방안 점검

정부의 회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고용문제가 중대한 현안인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을 통한 경제전략의 관점에서 고용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녹색환경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⁴⁷⁾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지

47) 그 밖에도 장시간 근로체계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향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원⁴⁸⁾함으로써 명분적으로 국가의 품격 및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범지구적 문제에 주도권을 선점해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녹색성장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녹색산업은 이른바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녹색산업은 기존 산업과 비교해 몇 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녹색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기존의 제조업에서 노동수요의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고, 고용없는 경제성장을 완화·저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9대 핵심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사업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규모 및 기간, 연도별 예산소요, 국비·지방비·민간자본 등의 배분 비율, 일자리 창출의 규모 등을 조정하고, 부처별로 연계사업에 대한 역할의 분담,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확정해야 한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을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따른 재정의 소요는 추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해 뒷받침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녹색 뉴딜사업’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통합가능성을 검토하여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와 기업간 협력체제 및 녹색산업의 과제 발굴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체제 및 녹색산업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녹색산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의 기술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사이의 협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유관 기업인 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상시화하고, 기업이 제기하는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⁴⁹⁾ 또한 향후 신

48) 최근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녹색성장산업의 제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와 시스템(녹색성장위원회의 조직체계 등)을 전수해 주고, 그 대가로 탄소배출권의 확보를 추진한다고 한다(조선일보 2010.6.14자).

49) 2010년 6월 16일 국내에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성장 동력 산업 등 다른 부문에서도 녹색산업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가 이미 발표된 녹색산업은 현 시점에서 일자리의 창출 효과가 크면서도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 발굴·추진하고, 앞으로 R&D 등 녹색기술과 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의 발전 전략과도 연계해 녹색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⁵⁰⁾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및 일자리의 재정 지원은 확충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법인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 희망근로나 복지 바우처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의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취업에 애로가 많은 취약계층, 여성, 고령자 등의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중급기술 및 단순기능이 필요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

중급기술 및 단순기능이 필요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녹색일자리에는 기존의 숙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고용정책상의 장점이 있다. 녹색성장은 중급기술 및 단순기능이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해낸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근로의 성격을 띤 일자리 창출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녹색성장은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화, 기존 일자리의 녹색일자리화, 새로운 녹색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업무(관리·조작·계측 등)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녹색일자리 중에는 지식집약적인 직종 및 환경개선에 직접적인 영

정부·시민사회·민간부문간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성장계획의 수립·이행·실행을 지원하며, 나아가 개도국의 여러기관들도 직접 참여해 개도국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자문기구로서 전 세계 녹색성장의 경험을 나누고 전파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조선일보 2010.6.16자). 또한 녹색일자리 통계자료와 정책방향 설정 및 분석간의 연계할 필요가 있다.

50)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정부는 2009년 1월중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발표하였다.

향을 미치는 단순기능의 직종⁵¹⁾이 있지만, 재활용·건설·바이오 연료 부분의 녹색일자리는 낮은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활용의 일자리는 직업적이고 안전보건의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며 저임금 등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바이오 연료용의 원료를 생산하는 일자리는 업무에 부하가 크고, 유해 화학물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녹색산업별의 임금 격차문제는 대졸 청년층의 취업을 지연시키거나 여성층의 취업을 진입하거나 재진입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최저기준의 설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한 인력 부족률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여서 노동시장에 원활한 수급을 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고용서비스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 대상의 인턴사원제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제에 대한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등을 통하여 청년 구직자들의 초기에 직업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채용에 대한 수요를 정부의 사업과 연계할 때에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 산학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과 직업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청년실업은 학교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이 맞지 않는 것이 청년실업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수요를 파악한 뒤 이를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제한 완화, 근로자의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쉽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 고용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51) 자전거의 수리·배달,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 수리 및 생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재건축, 유기농 재배, 친환경적 재료로 가구 생산, 에너지 효율화 건축,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처리, 유해물질 청소, 환경 정비, 친환경 소재 및 중간재 생산 제조업, 재활용 용품생산, 화학물질 사용을 하지 않는 청소, 대중교통, 태양에너지 장치 설치 및 정비, 삼림 정비, 도시권 농림업, 수도 재정비 등이 있다.

4.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현황 파악 등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현황 파악 등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녹색일자리의 수요 공급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분석은 매우 미흡하며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초기 수준에 있다. 특히, ‘인력양성 시스템’의 경우 실제로 영향에 미치는 데이터가 없고, 대학(2년제 포함)에서 배출되는 인력 규모, 비정규교육 프로그램의 파악과 훈련기관에서 프로그램과 훈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기술개발, 동기부여 시스템, 인력양성 시스템 분야 등의 정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통하여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녹색일자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수요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을 신설·개편하는 등 직업훈련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시장친화적인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⁵²⁾ 또한 녹색일자리에 대한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공공고용지원 서비스의 혁신을 위하여 워크넷(WORKNET) 등 구인-구직 관련 정보를 크게 확충하고,⁵³⁾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알선에 대한 전문성의 제고, 취업정보·취업알선·직업능력개발을 통합 제공하는 구인·구직 원스톱(One Stop)고용서비스,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의 지원 강화 등 고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실직자나 청년 구직자가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간고용 서비스시장은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를 중심으로 주로 일용직 등에 대한 단순한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고용지원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민간고용지원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 등 전문 인력의 양성, 민간취업 지원기관의 육성 등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52)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자료, 2009.5. ; 다만, 실제로 취업의사가 없거나 취업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통해 계좌를 발급받는 등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53)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제공에도 진력할 필요가 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산학 협력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하도록 재정지원을 하고,⁵⁴⁾ 기업에서도 사내 직업훈련에 대한 고용보험 등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5. 녹색일자리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이해 당사자 참여

녹색일자리의 사회적 대타협(대화)을 위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녹색일자리를 위한 고용전략의 수립과 이행에 당사자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위한 대타협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사회적 대타협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조합’도 경제·사회의 파트너로 삼아 공동 추진방향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업 내에서 작업장 혁신 사업에 근로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제안을 통해 작업장 혁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숙련기술자로서 고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기업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협력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도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노동운동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녹색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실제로 그러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행을 위하여 '지역 노사정'이 협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기존의 지방자치체의 관료 중심의 지역발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지역의 비전과 발전 방향

5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은 2010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녹색성장산업이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0 녹색성장분야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교육'을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 에너지 분야, 2차 전지분야)에 대해서 관련 업체 및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자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는 국내외의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한기대 2020. 6.15. 보도자료 참조).

에 공감대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⁵⁵⁾

V. 결 론

이상과 같이 녹색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도 중요하다. 녹색산업과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를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가교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범지구적 문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녹색성장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녹색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녹색산업 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돌파구로서의 법적 과제는 (i) 정부의 회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방안을 점검해야 한다. (ii)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체제 및 녹색산업 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iii) 중급기술 및 단순기능이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iv)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현황 파악 등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v) 녹색일자리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잘 알다시피 일자리의 유지와 보장은 최고의 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녹색일자리 창출은 좋은 일자리 기회와 연결되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통하여 녹색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R&D 재정 지원의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추진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 21세기형 신화를 형성할 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녹색산업, 녹색뉴딜,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녹색 사회적 기업

55) 송창용 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참 고 문 헌

- 강희찬 등,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CEO Information』, 제71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7.2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역할, 제2차 대토론회 자료집(2010. 4. 7)』
- 권경득, 『녹색산업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방안』, 대전지방노동청, 2009.12
- 권대봉, 『녹색성장 녹색직업 녹색인재』, 박영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권순우·신창목 외, SERI 전망 2010, 삼성경제연구소
- 기획재정부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2009. 1. 6(국무회의보고자료)
- 김승택, “녹색 성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12.
- 김승택,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8.
- 김형기,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의제”, 『노동저널』, 2009.2
- 김혜원, “고용·복지 연계형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경제성장과 연계된 고용정책 개선방향』, 노동부, 2010.
- 노동부, 『지자체 고용대책 활성화 방안』, 2010
- 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노동관서 합동설명회 자료집』, 2010.
- 노동부, “Green Job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국제노동정책브리프』 제24호
- 노동부, “미국의 일자리프로그램 최근 진전 상황”, 『국제노동정책브리프』 제70호(2010.4.20)
- 노진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와 노동조합의 과제”, 『노동저널』, 2009.8.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색성장위원회, 2009.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2009.
- 류필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변화의 시작”, 『나라경제』, 2010년 6월호
- 미래기획위원회 엮음, 『녹색성장의 길』, 중앙북스, 2010.

- 박상욱, 『지속가능한 한국발전모델과 성장동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손민중, “고용없는 회복 가능성 점검, 『SERI 경제포커스』, 제271호(2009.12.8), 삼성경제연구소
- 손영우, “프랑스의 녹색일자리 현황과 정부의 친환경경제정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12.
- 송창용 · 양승필, 생태 · 녹색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e-HRD 12-13호(2009.9.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창용 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오용선, 『한국산업화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녹색대안』, 한국학술정보, 2007.
- 안주엽, “성장친화적 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과 연계된 고용정책 개선방향』, 노동부, 2010.
- 윤영선 · 박철한, 파급효과로 본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녹색건설산업의 경제파급효과, 『건설이슈포커스』, 2009.4.15
- 이지훈 등,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CEO Information』, 제67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8.10.8.
- 장석춘, “경기침체 · 고령화-녹색성장이 해법이다-일본의 저탄소전략”, 공감코리아
- 장홍근 외, 『2009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노동부, 2009.
- 정성춘 외,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G20 정상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 『정책보고서 2010-04(2010.5.4)』
- 정형우, “OECD의 녹색일자리 연구 동향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노동』, 2010년 1월호.
- 조길영, 『참 녹색국가의 길』, 모아북스, 2010
- 조준모, “노사관계와 일자리”, 『경제성장과 연계된 고용정책 개선방향』, 노동부, 2010

- 최숙희, “실업대란 시대의대안, 맞춤형 복지,”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4.10
- 최호진 외,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연구』, 법문사, 2008
- 최희선 · 박기범 · 송완흡,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자료 2009-118(2009.12.28), 산업연구원
- 한동균, 『지역수준의 일자리 창출 사례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9.
- 허재준, “일자리 창출력저하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연계된 고용정책 개선방향』, 노동부, 2010.
- 허재준 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노동부, 2009
- Jill Kubit, Michael Renner, Sean Sweeney, “녹색일자리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12.
- Robert Pollin,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정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12.
- Miranda Schreurs, “환경보호, 기술혁신 및 녹색일자리-독일식 모델을 중심으로 한 고찰-,”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12.
- 뉴스위크 한국판, “녹색일자는 성장 촉진제”, 2010.3.31

Legal Tasks for Green Job Creation through the Green Industry' Growth

Lee, Seung-Gil*

From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new technology and new growth industry has been the leading industry focused on a new development pattern designed to free us from dependency on the fossil fuel system and to address the problems of low birthrates and an aging society. The competitiveness of the green industry is important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Korea's government needs to take action on climatic change related to green industry through a role as the bridge linking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a responsible member of a global society and to contribute towards that global society, it is vital for Korea to improve its brand value through the suppor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assisting the world to cope with global problems.

This research comprises five chapters. To promote green jobs through the expansion of green industry, chapter 2(II) examines the concept, objective, promotion field, and scope of green industry; the creation of green industry and green jobs; and the policy change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 green jobs. Chapter 3(III) considers the contexts to promote and create green jobs. Chapter 4(IV) pinpoints the legal requirements to creating green jobs through the expansion of green industry. The conclusion, chapter 5(V), summarizes the main arguments and offers suggestions to invigorate the economy through job creation via the enlargement of green industry in the short term and to lay the legal foundation for durable development of green industry in the long term.

The durable development of green industry is imperative to advance the

* Ajou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in Labor Law

system of Korean green industry and to create more green jobs. To achieve these developments, several legal steps must be taken.

- (i) Projects need to be continuously checked through government administration.
- (ii) There must be activ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enterprise on the tasks of green industry.
- (iii) The legislative system must be improved for low or middle-skill job creation.
- (iv) Infrastructure, such as programs to train skilled labor an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must be created and built.
- (v) All interested parties must participate in the social compromise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jobs.

As is generally known, it is the best welfare to secure jobs. To create green jobs by fostering new growth power is important for the opportunity of good jobs. To achieve this, Korea needs to enhance the creation power of green jobs through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However, when we attain the myth of the 21st century by fostering the new growth power industry, such as the promotion of green growth through a stronger support of R&D finance to prevent global warming, we should keep in mind that we must achiev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as well.

Key Words : Green Growth, Green New Deal, Green Industry, Green Job, Green Social Company